

보도자료

○ 제공일 : 2004. 11. 10 (수)
○ 제공자 : 농림부 식량정책과
○ 과 장 : 김 현 수
○ 사무관 : 정 해 린
○ 전 화 : 500-1756

이 자료는 2004년 11월 12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 발표

- 쌀농가소득안정방안 법제화,
쌀농가소득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양정제도 전면 개편 -

□ '04. 11. 11일 허상만(許祥萬) 농림부장관은 쌀협상결과와 관계 없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,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**쌀농가소득안정방안**을 발표하였다.

○ 소득안정방안의 기본골격은 '01~'03년 평균 산지쌀값, 추곡 수매제 소득효과, 논농업직불 등 최근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**80kg 가마당 17만원** 수준으로 **목표가격**을 설정하고, **당년 쌀값과의 차이**를 **직접지불**로 보전한다.

- 직접지불은 **고정형직불금**으로 1ha당 **60만원**을 지급하게 되며,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%(보전수준)가 고정형 직불금 보다 클 경우 **변동형직불금**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.
-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**3년 단위로 고정**하여 운영하며, DDA협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게 된다.

○ 이러한 쌀농가소득안정방안 마련으로 농업인들은 향후 쌀값이 '03년 수확기 쌀값 대비 5% 하락할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8% 수준을 보전받게 된다.

□ 許장관은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법제화하여 어떤 경우에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

□ 이러한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확고히 하고 쌀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.

○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통한 직접지불제가 마련됨에 따라 가격 지지 보장장치의 일환인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,

○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.

○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 수준에서 1,100만석(유통량의 70%)까지 확대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고,

○ 전업농의 규모화와 품질고급화를 통해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,

○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농업인과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.

농가 수입 비교표

□ 목표가격 : 170,070원/80kg

－ 고정형직불 : 60만원/ha(9,836/80kg)

－ 변동형직불 : $[(\text{목표가격} - \text{당년쌀값}) \times 80\%]$ - 9,836원

□ 2003 산지쌀값 : 162,640원/80kg

(단위 : 원/80kg)

'03년 가격대비	1%하락시	2%	3%	4%	5%
○ 당년 쌀값(A)	161,014	159,387	157,761	156,134	154,508
○ 직접지불(B)	9,836	9,836	9,847	11,149	12,450
－ 고정형	9,836	9,836	9,836	9,836	9,836
－ 변동형	-	-	11	1,313	2,614
농가수취수입(C) (A+B)	170,850	169,223	167,608	167,283	166,958
목표가격대비	100.5%	99.5	98.6	98.4	98.2

이 자료는 2004년 11월 12일(주)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설 명 자 료

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

2004. 11. 11

농 립 부

목 차

1. 여건 및 전망	1
------------------	---

2. 농가 소득안정 방안	2
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양정제도 개편	3
------------------	---

< 참고 > 쌀농가소득안정방안(요약)

1. 여건 및 전망

□ 쌀협상은 마지막 단계이며, 지금까지 협상진행상황에 대해
공청회(11월중순) 등을 통해 최종 여론수렴을 할 계획임

○ 시장접근물량(TRQ) 증량, 소비자시판 등도 일정수준
허용이 불가피할 전망

○ 공급과잉 기조에서 쌀협상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
수입증가 및 가격하락에 대비한 사전제도 정비 필요

□ 그러나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
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

○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단가
인상에 어려움이 있고,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속적으로
쌀값이 하락할 경우 보전수준이 미흡할 가능성

○ 추곡수매제는 WTO보조금 감축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
되었으며,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시 더욱 위축될 전망

⇒ 농가의 소득불안 해소방안 마련을 전제로

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양정제도 개편은 불가피

□ 정부는 금년 5월부터 농가소득안정방안 시안을 마련하고
농업인·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간에 의견 조율

2. 농가 소득안정 방안

□ 소득안정방안은 농가의 최근 실질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의 98% 수준(쌀값 5% 하락 가정)을 직접지불로 보전

○ 목표가격은 '01-'03년 산지쌀값,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, '03년 논농업직불을 감안하여 결정(170천원/80kg)

* 쌀값이 '03년 산지쌀값(162천원/80kg) 대비 5% 하락할 경우 농가는 167천원/80kg을 수취하게 됨(목표가격의 98.2%)

* 직접지불은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구성

- 고정직불 : 쌀값하락과 관련없이 고정금액을 지급

- 변동직불 : 쌀값하락 수준에 연계하여 일정수준 지급

□ 정부 시안을 토대로 농업인·전문가·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

□ 농가소득안정방안이 마련되면 현행 추곡수매제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, 앞으로 쌀 시장개방폭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곡수매제 개편은 불가피

○ 변동직불(WTO 감축보조) 도입을 위해 수매제 개편 불가피

○ 목표가격에서 이미 수매제의 직접소득효과를 반영

○ DDA이후 추가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전망

3. 양정제도 개편

- 양곡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은 ①공공비축제 근거규정 신설 ②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③수입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임

-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는 시장가격으로 매입·판매

- * 600만석 수준의 공공비축 기준물량을 2회전 운영 방안을 검토중

- 쌀값 지지를 위한 국회동의제는 소득안정방안이 제도화 되면 폐지가 불가피

- 양곡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며,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 강화

-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1. 2 국무회의 심의·의결하여 11. 9국회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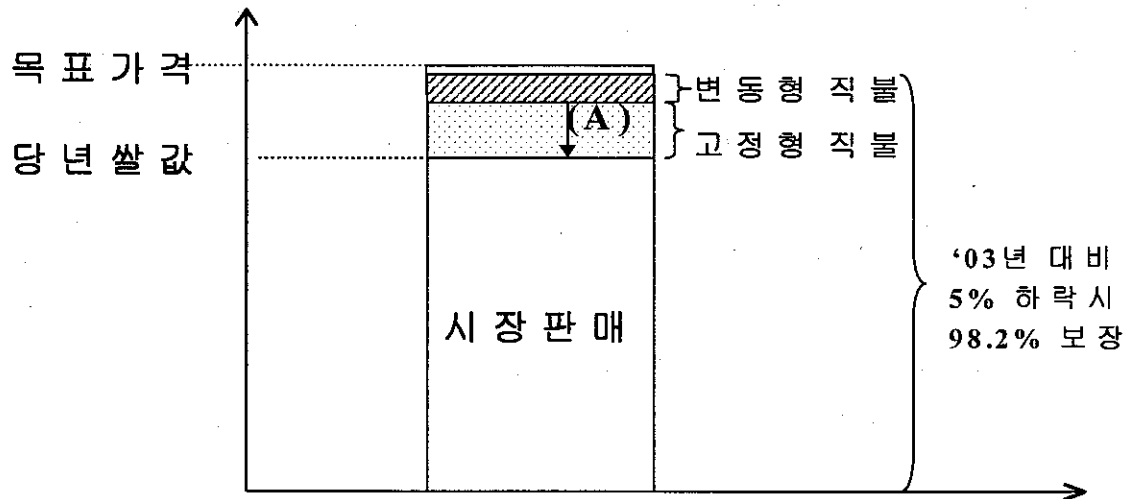
- 2004년산 추곡수매는 현재 정부안(4% 인하)에 의한 잠정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중

- 9.30일부터 RPC 산물수매를 실시중이며 포대수매는 11.1일부터 실시

< 참고 >

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 (요약)

□ 직접지불 금액(A) = (목표가격 - 당년쌀값) × 보전수준



* A : (목표가격 - 당년쌀값)의 일정부분

○ 목표가격 : 170천원/80kg 수준

○ 보전수준 : 외국사례, DDA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(80%)

*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300엔(현미 60kg 기준)을 고정지급하고, 가격차의 50% 추가지급

□ 지불방법 : 고정형직불(허용보조) + 변동형직불(감축대상보조)

○ 고정형직불 :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

○ 변동형직불 : 전체 직불금액(A)에서 고정형직불을 차감한 만큼 지급

* 미국은 '02 Farm Bill, 일본은 '04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을 통해 고정형·변동형 직불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

이 자료는 2004년 11월 12일(수, 목) 이후에 보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문답자료

2004. 11. 11

농 립 부

1.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추진 배경은 ?

□ 도하개발아젠다(DDA)협상과 쌀협상 이후에는 현재의 추곡수매제와 논농업직불제 등 쌀관련 직불제로는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현행의 추곡수매의 재원은 WTO협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'95년이후 지금까지 크게 축소되었고, DDA협상 이후에는 수매제 자체 유지가 어려울 전망

○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환경보전직불로 분류되어 일반농법보다 추가되는 비용이나 소득손실에 한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데 한계

○ 쌀소득직불제도 기준가격을 최근의 평균쌀값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이 어려움

□ 쌀협상이나 DDA협상등 여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직접지불방식의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한 것임

2.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의 목표가격 설정 기준은 ?

☐ 정부가 시안에서 제시한 목표가격 17만원은,

- ① 3년간('01~'03) 평균 산지쌀값(158천원/80kg)
- ② 논농업직불 효과(9천원/80kg)
- ③ 수매의 직접소득효과(3천원/80kg)를 감안하여 결정

☐ 이는 현재 농가가 쌀로 인해 실제 받고있는 수입을 모두 합한 것임

3. 목표가격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?

☐ 목표가격은 기본적으로 쌀협상의 영향이 없었던 최근연도의 농가 쌀수입 수준을 앞으로는 최대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

- 따라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 물가상승율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,
-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쌀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

4. 쌀값하락은 어느정도로 예측하고 보전액은 얼마인가 ?

□ 기본적으로 쌀값은 생산과 수요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, 국내수급만 균형을 이루어 간다면 쌀협상 등에 따른 쌀값 하락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쌀값하락에 대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
□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보면,

○ 쌀값 5%하락을 가정할 경우

-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고정형 직불 600천원/ha(80kg 가마당 9,836원)과 변동형 직불159천원/ha(80kg 가마당 2,614원)이 됨

○ 아울러, 농가 실제 쌀 판매 수입(80kg 가마당 154,508원)을 포함할 경우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.2% 수준이 됨

※ 고정형 9,836원 + 변동형 2,614원 + 쌀판매 수입 154,508원 = 166,958원
(목표가격 17만원의 98.2%)

5. 소득보전직불 대상농지와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?

☐ 쌀농가소득보전직불 대상농지는 현재 논농업직불금을 지급 받는 농지가 대상이며

○ '98 ~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함

☐ 지급대상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함

6.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?

☐ 현재는 정부가 시안을 마련한 단계로서 앞으로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임

7. 예산반영 수준과 법개정 등 앞으로의 추진 절차는 ?

☐ 쌀농가소득안정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안이 확정되는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

☐ 앞으로 쌀소득안정방안을 뒷받침할 법개정은 입안 과정을 마치고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등 입법과정에 들어갈 예정임

8. 금번의 직불제 실시로 쌀농가의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?

□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의 목표가격 수준이 최근연도 쌀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쌀농가소득을 현재보다 높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

○ 현재의 쌀농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

9. 쌀농가소득안정방안과 같은 제도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?

□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○ 미국의 경우 “경기상쇄직접지불”(CCP : Counter-Cyclical Payment)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쌀 등 10개품목에 대하여 목표가격과 유효가격(시장가격과 용자단가중 높은 가격에 고정직불단가를 더한 금액)차이의 85%를 보전(고정직불 2.35\$/100Pound)

○ 일본의 경우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“도작소득기반확보 대책”에서 고정직불로 300엔(60kg현미)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당년가격 차액의 50%를 보전하고 있음

10.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?

- 추곡수매국회 동의제는 그동안 추곡수매가격을 통한 쌀농가 소득보장장치로 역할을 해왔음
- 그러나 '95년 이후 WTO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량이 크게 축소되었으며,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면 추곡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보조금의 축소가 전망되어 추곡수매 국회동의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음

※ 수매보조금(AMS) : ('95) 2조 344억원 → (2004) 1조 3,598(△ 6,746)

- 또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서 추곡수매의 소득효과가 목표가격에 반영되어 농가소득을 지지하게 되므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음

11.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?

- ☐ 그동안 추곡수매를 통해 국민식량의 비축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WTO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DDA타결 이후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 비축량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됨
 - 따라서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WTO협정상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려는 것임
- ☐ 그동안 추곡수매에 WTO보조금(1조 4,900억원)의 90%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인들의 소득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,
 - 추곡수매에 사용하던 보조금을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의 변동형 직접지불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임

12. 공공비축 물량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인지 ?

- 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비축물량은 양곡년도말(매년 10월말)을 기준으로 600만석 수준을 비축하고 수확기에 300만석을 사고 단정기에 300만석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 - FAO에서는 비축수준을 소비량의 17~18%를 권장, 우리나라의 경우 600만석 내외 수준으로 2개월간의 국민식량임

13. 공공비축용 쌀은 시장가격으로 산다고 했는데 가격 결정 방법은 ?

- ☐ 공공비축 쌀은 시장가격으로 사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야만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음
- ☐ 시장가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공공비축물량의 매입방법과 함께 검토중에 있으며,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

14. 공공비축을 시행할 경우 현재 수매물량보다 줄어 들어 수확기 쌀농가의 판로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?

- ☐ 앞으로 공공비축제의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,
 -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감안하여 600만석을 기준물량으로 매년 300만석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하고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- ☐ 수확기 농가판로는 기본적으로 산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(RPC)의 경영활성화와 시설확충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
 - 이를 위해 그동안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유도해 왔으며,
 - 건조·저장시설을 현재 568개소(2003년말 기준)에서 2010년까지 7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600만석 수준의 RPC 수확기 벼매입을 1,100만석(유통량의 70%)까지 확대해 나가겠음

※ RPC 건조·저장시설 : ('03) 568개소 → (2010) 1,308개소

15.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시기는 ?

- ☐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1월2일 국무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11월 9일 국회에 제출 되었음
- ☐ 정부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공비축제 도입은 '05년산부터 시행될 예정임

16.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처리방향은 무엇인가 ?

- ☐ 금년 추곡수매량 및 수매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제출되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임
 - 앞으로 정부가 제출예정인 쌀농가소득안정방안, 양곡관리법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
- ☐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4~5배에 달하는 국내외 가격차의 축소가 급선무이며, 이를 위해서는 추곡수매가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